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부국장

아프면 쉴 권리, 어디서 멈췄나

경남 창원에서 대리운전하는 50대 권 씨는 2022년 9월 밤 공유자전거를 타고 고객의 차량이 대기하는 쪽으로 가다가 그만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뼈를 접합하는 수술로 열흘을 입원했고 뼈에 박았던 철심 분리 수술로 또 일주일을 입원하면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완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2차 교통사고로 또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40대 박 씨는 쿠팡필드먼트서비스 무기계약직이다. 한여름이면 38℃를 웃도는 찜통 같은 창고에서 물품 분류작업을 했다.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어지럽고 메스꺼움이 올라와 다리가 휘청일 때도 있었다. 그는 정형외과에서 온갖 주사를 달고 살았다. 지난해 여름 집에서 왼쪽 팔꿈치를 다친 뒤로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릴 때마다 심한 통증을 느꼈다. 의사는 그에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일을 잠시 쉬고 치료받을 것을 권했지만 그는 하루라도 결근하면 유일한 수단인 만근수당을 받을 수 없어 통증을 무릅쓰고 출근했다.

취업규칙에 병가가 있지만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무급 병가를 사용해야 하는 탓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결국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받아야 했다.

대리운전기사 권 씨와 물류센터 노동자 박 씨의 공통점은 아파도 참고 일하다 더 큰 사고 또는 질병을 겪었다는 점이다. 다행히 권 씨는 산재보험이 적용돼 1차 사고 후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병원비는 충당했어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2차 사고를 당했는데 두 번째 사고 때는 산재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대리운전기사처럼 특수고용직일 경우 한 달 수입이 80만 원보다 적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늦게 상병수당 도입

이들처럼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자를 위해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아프면 쉴 권리’가 대두되자, 정부는 2022년 7월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 둘 다 없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뿐이다. 이는 국제적 흐름에서 한참이나 뒤쳐진 출발을 명시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아프면 쉴 권리’가 흔들리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시범사업을 3단계로 진행해 내년부터는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본사업 제도화를 2027년 이후로 슬그머니 미뤘다. 대신 당시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상병수당의 본사업 실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상병수당 시범은 1, 2단계를 거쳐 7월 1일부터 3단계 사업 중이다. 소득 하위 5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건강·고용·산재보험 관련 기준을 충족한 15~64세 직장인 또는 올해 기준 월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라면 하루 최저임금의 60%(4만 7,560원)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일수는 150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8,431명(1만 3,252건)에게 평균 18.7일 치 상병수당 86만 3,332원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혜택을 본 노동자들은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간병인 A 씨는 왼쪽 무릎 안쪽 반달연골이 찢어져 지난해 두 달 가까이 일하지 못했다. 이 기간(65일) 상병수당을 신청해 47일간 휴업급여 217만 원을 받았다. 뇌경색과 모야모야병으로 입원한 화물차 운전자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100일간 상병수당으로 461만 800원을 손에 쥐었다.

그런데 내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이보다 훨씬 쪼그라들 것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146억 500만 원이었던 상병수당 예산을 내년에는 61억 4,500만 원으로 무려 57.9%를 삭감할 계획을 세

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이 33.2%에 그쳐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저조한 상병수당 신청, 다 이유가 있다

실제로 상병수당 신청은 저조한 데다, 시간이 흐를수록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7월 도입한 2단계 사업의 경우 지난해 월별 평균 건수가 36.5건 반면, 올해는 22.2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상병수당 신청이 저조한 데는 이유가 있다. 65세 이상은 제외되고 1차 시범사업 당시 없었던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이다. 신청자도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신청 서류 때문에 수당 신청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건당 2만 원인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어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파서 쉬어도 해고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유급병가 제도와 함께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사업 시행 시점이 늦춰지면서 최근 노동·시민·사회단체에는 정부 성격에 따라 상병수당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상자, 급여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급병가를 「근로기준법」에 신설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 규정을 신설해 제도를 못 박자는 취지다. 특수고용직 등도 상병수당 대상이 되도록 자격기준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팬데믹은 ‘아프면 쉴 권리’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더 늦기 전에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